

사회복지 주간 동향(23.9.4.~9.8.)

1. 용인시 정책 동향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죽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 생명지킴이 교육



- *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3동은 지난 25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의동) 위원들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했다고 30일 밝힘
 - 용인정신건강복지센터 강사가 진행한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정신건강 고위험 신호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방법부터 대상자를 전문기관에 연결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배움
 - 한 위원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웃을 자주 찾고 있지만, 막상 처음 보는 분들을 대할 때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어떤 불편을 겪고 있을지 막연한 느낌이 들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고위험 신고를 보내는 이웃을 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함
 - 동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서는 데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단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죽전3동 맞춤형복지팀)

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성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한테이블에 지역복지협력기관 인증 현판



*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희숙, 민간위원장 이명희)가 지역 내 반찬가게인 ‘참한테이블’을 지역복지협력기관으로 인증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힘

- 협의체는 5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정기 후원하거나 100만원 이상을 일시 기부하는 점포 또는 기관을 지역복지협력기관으로 지정함
- 참한테이블은 지난 5월 중 협의체와 협약을 맺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매월 2차례 국과 밀반찬을 제공하고 있음
- 동 관계자는 “참한테이블이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돕기 위해 선뜻 나눔에 동참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성북동 맞춤형복지팀)

3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해소 캠페인



- *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정열)가 지난 30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31일 밝힘
 - 이날 10명의 위원들은 반지하나 원룸이 밀집한 주거지역을 돌며 주민들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동에 알려달라고 부탁함
 - 이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관심을 당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긴급복지, 사례관리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함
- *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찬 행복밥상, 이불세탁서비스, 인지미술치료, 유정란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동천동 맞춤형복지팀)

4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구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인가구에 마음건강 반려식물 나눔



- * 구갈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고립도가 높은 1인 취약가구를 위한 반려식물 나눔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제공한다고 6일 밝힘
 - 키우기 쉬운 다육식물 위주로 60가구에 나눔을 할 계획이며,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식물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마음에 위안을 얻고 밝아질 수 있도록 이끌 예정
 - 다육식물은 용인시화훼연합회(회장 조성민)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그 의미를 더함
 - 동 관계자는 “반려식물은 고립도가 높은 1인가구에 외로움을 해소하는 존재”라며 “내 집안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작은 반려식물을 통해 생활 속 활력을 갖길 바란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구갈동 맞춤형복지팀)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고금리 가게대출에 대해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 지원

< 코로나19 시기 고금리 신용대출 받은 가게신용대출도 저금리 대출 지원 >



- *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게신용대출을 받아 사업 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3.8.31일부터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됨(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
 -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 '23.3.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 개편을 시행
 -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8.24일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금액 : 약 1조원)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음
- *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년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게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게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함,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게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시키고 있음
 -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게신용대출은 ①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의 ②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1.1일부터 '22.5.31일 까지이며, ③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④신용대출과 카드로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가계신용대출의 ⑤차주별 대한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한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한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
-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22년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고금리(7%)이상 가계신용대출 중 2천만원 이하 대출이 86.7%(건수기준), 1천만원 이하 대출은 차주당 약 1.8건 보유 (63만명, 114만건)
-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 용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그러나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취지와 차주별 대한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 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함
- 사업용도지출금액은 ⑥‘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 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 가능
-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 가능, 신청 및 상담은 8.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
-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8.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 가능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출처:금융위원회)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민·관 협력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노인일자리 확산한다

< 사업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분석 토대로 7개 우수사업 선정 및 전국 확대 >
<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과제 차질없이 이행 >

- *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의 2022년 실적을 평가하여 7개 모형을 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힘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은 기업 사회공헌기금 등의 외부자원과 공적자원(예산)을 연결하여 ESG 분야(환경, 안전, 복지서비스 등)의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신설된 2022년에는 연간 79억 원의 국비를 투자해 5,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
 - 60세 이상 참여, 월 32만 원/최대 5개월 지원, 기업은 참여노인에게 월 71.2만 원 이상 급여 지급
 - 작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의 ESG 성과를 계량화하여 분석하기 위한 ‘ESG 성과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인적 ESG 생산성 등을 분석해 우수사업을 선정
 - 해당 사업이 ESG에 기여한 성과를 계량화한 지표(예: 참여자 투입 대비 탄소발생저감량)
 - 먼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안부 확인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LH 생활돌봄서비스 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업)’이 우수사업으로 대상을 수여함
 - 이외에도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유아숲체험장, 쉼터 공간, 숲길 조성에 참여해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폐광지역 환경개선 사업(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협업)’이 대상 사업으로 선정
 -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로 선정된 사업은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

붙임 1		우수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선정 결과		
구분	추진 지역	사업내용	협력기관	참여자 실적 ('22)
대상	서울	· (사업명) LH생활돌봄서비스(LH 80+돌봄가 사업) · (사업내용) LH 독거노인 대상 안부확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주거시설 안전점검, 일상생활 지원 등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129명
대상	강원	· (사업명) 강원랜드 노인일자리 선도모델사업 · (사업내용) 탄탄대로(폐광지역 생태산업 유산길) 힐링 숲길 조성, 취약계층 생활편의 지원, 재봉틀 공방 운영 등 지역균형 및 현안해소 사업 추진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142명
최우수상	인천	· (사업명) 시니어 소아암 가정 돌봄지원사 · (사업내용)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소아암 가정의 어려움과 노인 일자리의 연계로 간병과 돌봄을 제공하는 등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IBK 기업은행	12명
최우수상	경기	· (사업명) 취약계층 의료돌봄서비스 사업 · (사업내용) 의료분야 전문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안성시 거주 취약계층(고령자, 독거노인, 경로당 등) 대상 건강증진 및 안전확인, 치매 예방활동 프로그램 등 제공	경기도안성시(사회복지과)	69명
최우수상	경남	· (사업명) 뉴-KOEN 바다사랑지킴이 · (사업내용) 지역사회 노인인력을 활용한 해안가 환경개선, 꽃길 가꾸기, 공공시설물 방역 등 농어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쾌적한 해안환경 구축	한국남동발전	270명
최우수상	충남	· (사업명)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연계한 시니어 일자리 창출사업 · (사업내용) 학교, 상가, 공동주택 등에 종이팩수거함 설치 후 회수, 재생 휴지로 교환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등 무상 지원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56명
- ('22년 수상)	제주	· (사업명) 제주푸르미 · (사업내용) 제주도 내 주요 관광지로 이용되는 오름 18개소 대상 오름 해설 제공 및 플로킹 캠페인 진행 등 제주 오름 생태계 복원 활동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6명

* 대상 수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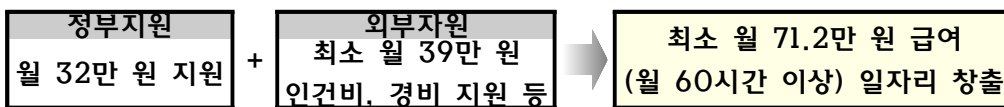
LH80+돌봄가사업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 신뢰를 향한 New Start LH	한국노인인력개발원 Korea Elderly Human Resources Institute For The World
사업목적	사회 취약계층인 LH 독거노인 거주자의 어려움과 노인일자리 연계를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분야	S(Social) : 돌봄, 지역지원 등		
협업기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4.6억원 예산지원)		
사업내용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실태 조사, 정서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는 양질의 일자리		
	추진배경 •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 80세 이상의 LH 독거노인 거주자 급증 • 독거노인 거주자 대상 정서 및 생활지원,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건강관리 등 돌봄 서비스 관련 제도적 지원 미흡	기대효과 •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전으로 노인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 • LH 임대주택 거주 80세 이상 취약노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서 및 생활안정 지원, 이웃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관계망 확대	
일자리 창출	참여자 129명, 월평균 급여 72만원, 근무기간 5개월		
사업지역	서울		
관련사진			

폐광지역 환경개선 선도모델 사업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목적	사회폐광지역* 생태 관광 환경 보전과 지역사회 자생력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삼척시	
사업분야	E(Environment) : 환경, 에너지, 쓰레기 등 / S(Social) : 돌봄, 지역지원 등	
협업기관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14.3억원 예산지원)	
사업내용	추진배경	기대효과
	· 협력기관 ESG경영 의제 발굴 애로 확인 · '강원랜드 사회통합형 노인일자리' ESG 분야 중심 재편 및 선도모델 시범사업 제안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참여자 대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폐광지역 대표적인 생태관광자원의 효율적 이용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협력기관 ESG경영 실현
일자리 창출	참여자 142명, 월평균 급여 118만원, 근무기간 8개월	
사업지역	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삼척시	
관련사진		

붙임 2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목적) 신노년세대 역량을 활용하여, 외부자원, 수행체계 간소화 등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 개발
- (정의)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하여 사회적 현안을 해소하는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사업
- (사업영역) 사회서비스 등 ESG분야(환경, 안전, 복지서비스 등)
- (예산) 79억원, 민간경상보조
 - 국비 100%,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기업, 수행기관 등
 - 월 최대 1인당 32만 원(연간 최대 1인당 160만 원, 5개월)



- (참여자) 60세 이상 해당 사업에 선발된 자
 - (참여자 지위) 근로자
- (근무조건) 월평균 71.2만 원 이상 급여, 월 60시간 이상
- (운영방식) 외부자원의 성격과 고용형태를 고려하여 직접 또는 위탁운영 방식으로 사업 수행
 -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부)

3 중앙정부 복지현안

복지부·고용부·삼성 등,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

<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 출범 >
< 복지부, 고용부, 삼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간
5자 업무 협약 체결 >

-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삼성전자 인재개발원(경기 용인시)에서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함(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삼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은 자립준비청년 취업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 올해 하반기에는 전자/IT 제조기술자 양성 과정,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자 양성 과정 등 5개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자립준비청년 120여 명에게 취업 교육을 제공할 예정
 - 참여 청년들에게는 2~3개월의 교육 기간 동안 훈련수당과 숙식이 지원되며, 전문 취업 컨설팅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
 - 보건복지부는 취업 욕구가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참여자 모집 및 홍보를 지원
 - 삼성은 재원 마련, 교육 인프라 지원 등 사업 전반을 주관하며, 여러 관계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채용 연계를 활성화함
 - 고용노동부는 '미래 일경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훈련수당을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비의 운용과 사업 평가를 담당하며, 함께일하는재단은 참여자 모집, 교육 운영 등 실무를 수행할 예정

※ 보도자료 참조(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4 중앙정부 복지현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로 안내 서비스 시작

<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서도 서비스 안내 실시 >

- *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목)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5~25일)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음
 - 다문화 가정의 서비스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은 외국어 안내문이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 옴(다문화가정 이용현황 : '22년 2,243명, '23년 상반기 1,196명(전체 이용자의 약 1.7%))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7개 언어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다. 외국어 안내문은 8월 31일(목)부터 보건복지부 및 다누리 누리집에 게시되며,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 누구나 활용 가능
 - 이와 함께, 다누리 콜센터(1577-1366)*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동시통역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관련 문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 전문 통역사의 동시 통역을 지원받아 희망하는 언어로 답변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 가능

붙임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 * 사업 개요
 -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부담 완화
 -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16조에 따른 제공자 등록기관
 - (제공인력)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건강관리사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
 - 지자체별로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지자체별 확인 필요)
- (지원방법)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권 (바우처)이 지급되면,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
- (지원기간) 태아유형·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5~25일) 선택
-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 (서비스 가격) 서비스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가격 적용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본인 부담(서비스 가격의 약 20~31%, 통합형 표준 서비스 기준, 소득수준별 확인 필요))

[2023년 서비스 가격]

구 분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
1일 기준	132,800원	165,600원(인력 1명) 232,400원(인력 2명)	265,600원 *1인당 132,800원

※ 보도자료 참조(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서비스부)

5 중앙정부 복지현안

2022년 아동학대 중 가정 내 발생 81.3%,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 82.7%

<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

< 아동학대 신고는 46,103건으로 지난해보다 7,829건 감소 >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8월 31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힘
 - 2019년부터「아동복지법」(제65조의2*)에 근거하여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음
- *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2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
 -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6,103건(지난해 대비 14.5%↓),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지난해 대비 25.6%↓),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7,829건, 9,634건이 감소한 수치, (신고접수): ('18)36,417건→('19)41,389건→('20)42,251건→('21) 53,932건 (학대판단): ('18)24,604건→('19)30,045건→('20) 30,905건→('21) 37,605건
 - 2021년에는 중대 아동학대사건('21.3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임, 신고가 급증한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여전히 증가 추세('20년 42,251건 대비 9.1% 증가)
 - ②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함, 이는 2021년 83.7%보다 1.0%p 낮아진 수치이나 여전히 전체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2,738건(8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되었으나,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여전히 필요함
 - ③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0%인 2,787건,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153건도 포함된 수치
 - 즉각분리(일시보호) : 반복적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공무원이 피해의심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조치 전까지 보호 (2021.3.30.시행)
 - ④ 재학대 사례는 4,475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6.0%를 차지하며, 2021년에 비해 비중이 1.3%p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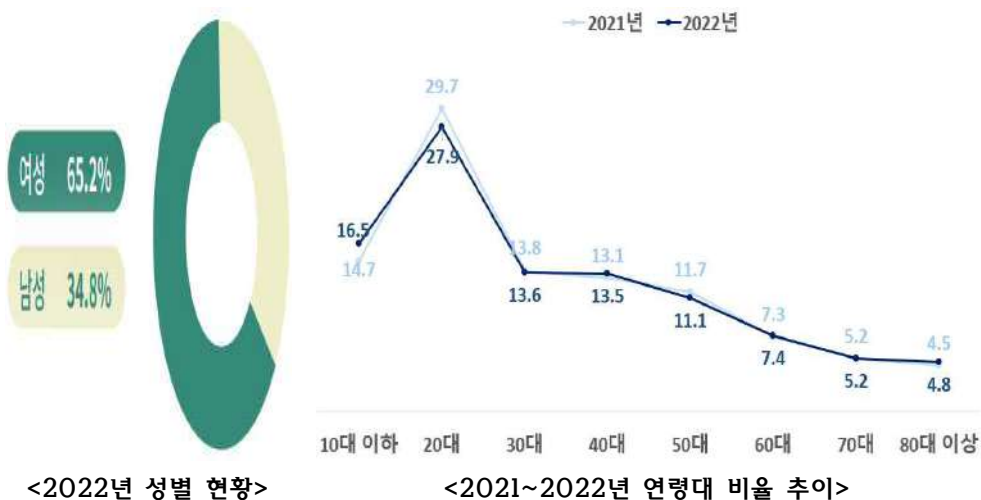
- 재학대 사례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22년에도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뜻함
- (재학대 비율) ('18)10.3% → ('19)11.4% → ('20)11.9% → ('21)14.7% → ('22)16.0%
-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 또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조사를 좀 더 면밀히 실시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함에 따라, 재학대 사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된 결과로 보임
- 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 연령별 특징으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28명(56%)이었고, 사망 원인별 특징으로는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이 5명
-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 ('18) 28명→('19) 42명→('20) 43명→('21) 40명
※ 보도자료 참조(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6 중앙정부 복지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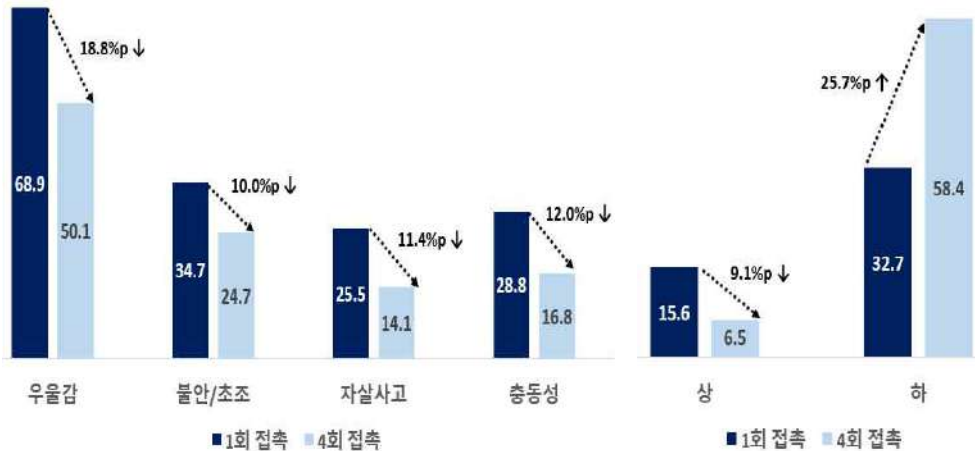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 2022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 및 10개년 주요 실적 발표 >

-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22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를 발표함
 -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 대비 약 25배 이상*으로, 자살 재시도 예방을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2013년부터 시행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병원 응급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사례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사례관리팀이 협업하여 내원 자살시도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자살 재시도 예방을 목적으로 함
 - 자살시도자의 자살사망률은 일반인의 자살사망률 대비 약 25배 (2013 자살실태조사)
 - 자살시도자 사례관리(case management)란 자살위험을 포함한 정신건강상태를 평가하여 자살시도자가 지닌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상담,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2022년 사업을 수행한 총 80개의 병원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2만 6,5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 65.2%(17,294명), 남성 34.8%(9,244명)로 여성 자살시도자가 남성보다 약 2배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7.9%(7,400명), 10대 16.5%(4,368명), 30대 13.6%(3,607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전년 대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시도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20대 비율은 소폭 감소(29.7% → 27.9%)하였고,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14.7% → 16.5%)



- 자살시도자의 10명 중 9명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성·연령대별로 충동성에 큰 차이가 없었음, 자살시도 동기는 ▲‘정신적 문제’(38.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인관계’(18.9%), ▲‘말다툼 등’(10.3%), ▲‘경제적 문제’(6.6%) 순으로 나타남, 자살시도 방법은 ▲‘약물음독’(56.0%), ▲‘둔기/예기’(20.1%), ▲‘농약음독’(6.0%), ▲‘가스중독’(5.3%)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자살 시도를 암시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자살시도자는 절반 이상(56.0%)
- 사례관리 서비스를 완료한 1만 1,321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 자살위험도가 높은 사람의 비율이 약 60% 감소(15.6%→6.5%)함, 이는 우울감(18.8%p↓), 불안/초조(10.0%p↓), 자살사고(11.4%p↓), 충동성(12.0%p↓), 상(9.1%p↓), 하(25.7%p↑) 등의 자살위험요인이 감소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주요 자살위험요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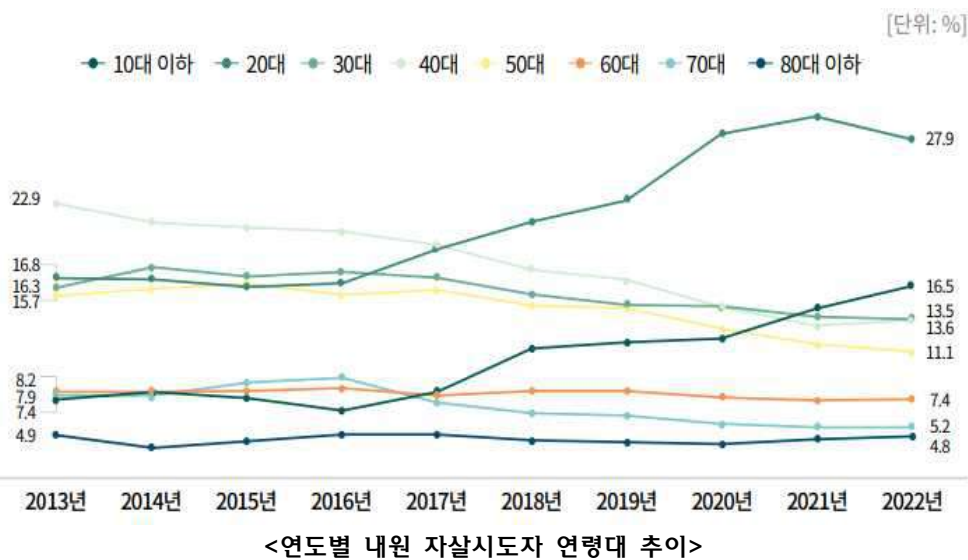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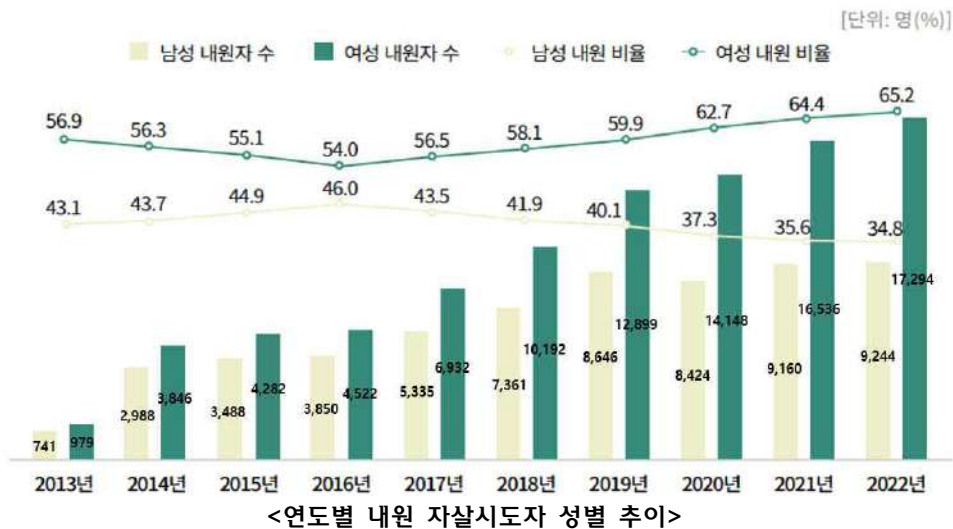
<전반적 자살위험도 변화>

- 10년 동안('13~'22) 사업을 수행한 결과, 수행병원은 초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13. 25개소→'22. 80개소)함, 지역별 자살시도자 분포와 의료기관 접근성을 고려하여 수행병원을 확대하였고 현재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의 48%가 참여함(사업 선정기준인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 177개 중 84개소 참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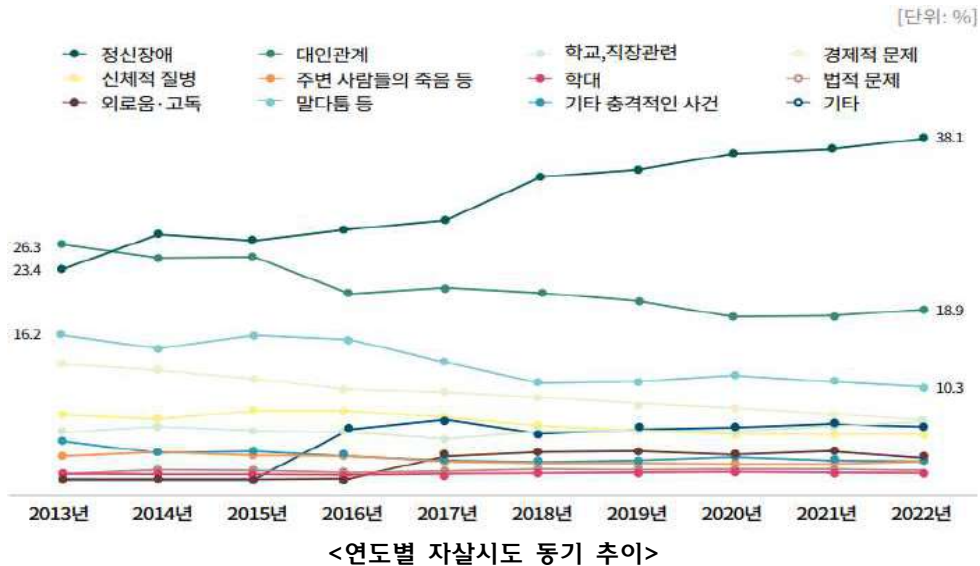


<연도별 사업 수행기관 수 및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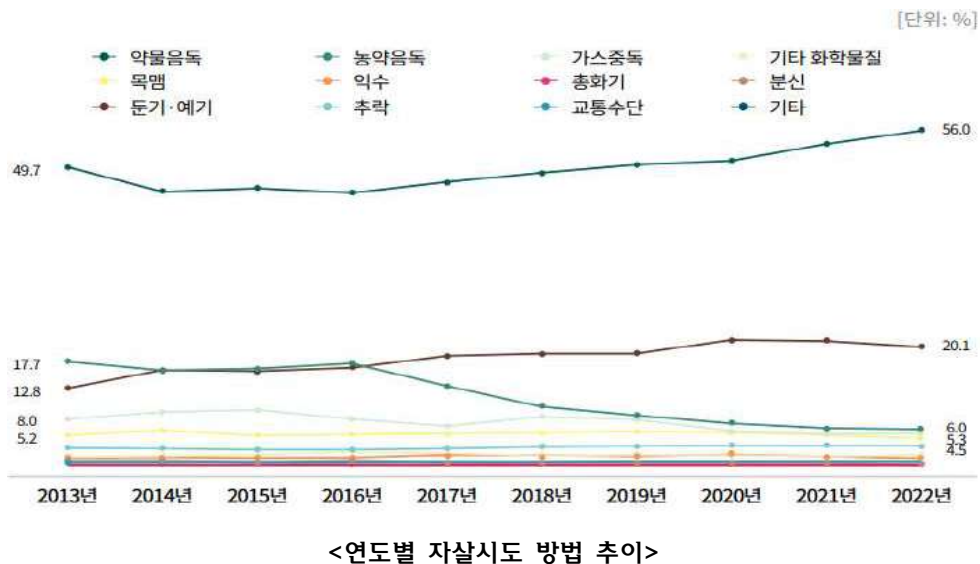
- 내원자 수는 사업 초기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13. 1,721명→'22. 26,538명, 총 150,868명)하였으며 여성 내원자 비율은 약 8.3%p 증가(56.9%→65.2%)함, 연령대의 경우 1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배 이상(7.4%→16.5%) 높아졌으며 20대는 11.1%p 증가(16.8%→27.9%)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폭이 큼, 반면 40대 비율은 9.4%p 감소하여 제일 큰 감소폭을 보임, 30대, 50대, 60대는 각 2.7%p, 4.6%p, 0.8%p 감소



- 자살시도 동기는 '정신적 문제', '대인관계', '말다툼 등', '경제적 문제'가 매년 상위 4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남, '학교, 직장관련'동기는 소폭 증가(5.3%→6.6%)하였으며 '정신장애' 비율은 꾸준히 증가(23.4%→38.1%)하였다. 반면 '대인관계'(26.3%→18.9%)와 '말다툼'(16.2%→10.3%)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자살시도 방법은 매년‘약물음독’,‘둔기/예기’,‘농약음독’순으로 나타났다.‘약물음독’은 꾸준히 절반 정도 차지하였고,‘둔기/예기’ 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12.8%→20.1%)하였으며,‘농약음독’(17.7%→6.0%)과‘가스중독(8.0%→5.3%)’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사례관리 서비스를 완료한 자살시도자 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33배 증가(341명→ 11,321명, 총 53,094명), 같은 기간 지역사회로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자살시도자 또한 32배 이상(135명→ 4,341명, 총 21,070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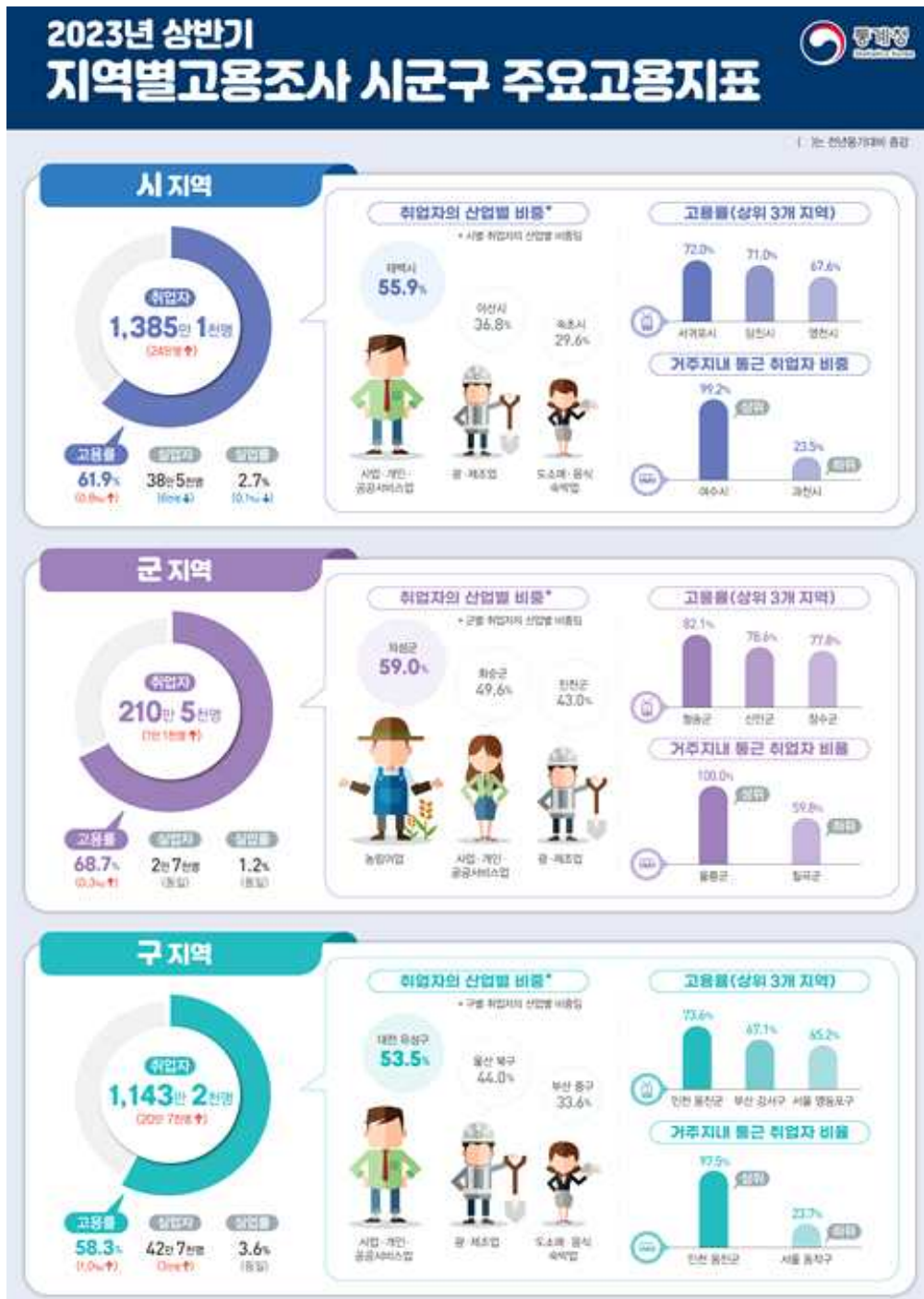
<연도별 사례관리 서비스 완료 현황>

- * 「2022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보고서」는 자살예방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
-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운영팀)

3.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 자료 : 통계청 자료(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